무안반도·광양만권 통합 무산 반응과 전망

“안타깝다” “당연한 결과” 깊어진 갈등 해소 과제로

무안반도와 광양만 권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10일 최종 ‘불발’됨에 따라 그동안 찬·반 논란을 거듭하며 불거졌던 지역간 분열과 갈등 해소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특히 무안반도의 경우 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5차례의 통합 시도를 하면서 지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를 치유하는데 민·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 무산희비 교차=행정구역 통합이 최종 무산되는 데 대해 지역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통합 찬성 측에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통합 반대 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었다. 정부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광양만 권 통합 운동을 주도했던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통합 무산은 안타깝지만 통합논의가 이번에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역민을 대상으로 통합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 인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반도 통합운동을 이끌어왔던 무안반도 통합추진위 신대운 집행위원장은 “지역의 역량을 모으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무산돼 안타깝다”면서 “통합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통합 반대 측의 입장은 ‘사필귀정’이라며 무산된 결과를 크게 반겼다. 광양만 권 통합을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광양시의회 장명완 의장은 “통합대상에서 광양만권 지자체가 제외된 것은 광양시민 등 지역민의 여론이 제대로 전달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무안반도 통합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정해전 무안사랑포럼 수석 상임대표는 “통합 추진과정에서 행안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말뿐인 자율통합을 시도했다”면서 “군민의 결정을 존중하고 화합을 통합해 군 발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 결과

지역	통합안	단체	(표본수)	응답(%) 찬	반	모름/무응답
목포권	목포－무안－신안	목포	1000	86.3(84.1)	13.7(13.3)	(2.6)
		무안	700	42.4(39.7)	57.6(53.9)	(6.4)
		신안	700	35.3(32.8)	64.7(60.3)	(6.9)
	목포－무안	목포	1000	86.3(84.0)	13.7(13.4)	(2.6)
		무안	700	43.4(41.3)	56.6(53.8)	(5.0)
	목포－신안	목포	1000	77.6(75.0)	22.4(21.6)	(13.4)
		신안	700	34.4(32.2)	65.6(61.4)	(6.3)
여수권	여수－순천	여수	1000	45.4(45.0)	54.6(54.1)	(0.9)
		순천	1000	68.0(64.5)	32.0(30.4)	(5.1)
	여수－순천－구례	여수	1000	25.8(25.1)	74.2(71.9)	(3.1)
		순천	1000	51.2(47.6)	48.8(45.4)	(7.1)
		구례	500	58.3(52.3)	41.7(37.4)	(10.3)
	여수－순천－광양－구례	여수	1000	51.8(51.1)	48.2(47.6)	(1.3)
		순천	1000	77.0(72.9)	23.0(21.8)	(5.3)
		광양	1000	18.3(17.2)	81.7(76.7)	(6.1)
		구례	500	63.4(57.9)	36.6(33.4)	(8.7)

※( )은 ‘모름/무응답’ 포함시 비율/95% 신뢰수준

◇의외 결과도 ‘눈길’=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의외의 결과도 나왔다. 무안반도의 경우 무안군보다 신안군의 반대가 훨씬 높았다. 목포시와 무안·신안군 통합안에 대해 무안군은 반대가 57.6%로 절반을 약간 상회했지만, 신안군은 응답자의 64.7%가 반대했다.

그동안 4차례에 걸친 무안반도 통합과정에서 찬성여론이 높았던 점에 비춰볼 때 신안군 주민들이 무안반도 통합에 대한 생각이 크게 변한 것으로 보인다.

광양만 권의 경우도 구례군은 여수와 순천·구례, 여수·순천·광양·구례 등 2개의 통합안에 각각 58.3%, 63.4%의 찬성이 나와 구례 주민 10명 중 6명은 자율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또한, 10년 전 통합을 한 차례 겪은바 있는 여수시는 순천시와 통합안과 순천·구례와의 통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45.4%, 25.8%로 낮았지만, 여수·순천·광양·구례 등 4개 지역 통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의 넘는 51.8%가 통합에 찬성했다.

◇남은 과제는 ‘갈등 해소’=통합논의 과정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지역간·단체간 갈등과 앙금은 커져만 갔었다.

무안에서는 폭력사건이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빚어졌고, 공무원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율통합이라는 명분을 무색하게 하기도 했다. 무안반도의 경우 이번이 5번째 통합 도전이었다는 점에서 지역간 갈등의 골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무안반도 통합은 지난 1994년부터 1997년 사이 세 번의 주민투표가 실시됐고, 2004년부터는 민간단체 차원의 주민운동이 전개됐었다. 하지만, 번번이 무안군의 반대로 통합이라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광양만 권도 순천시의 독자적으로 정부에 통합을 건의하면서 인근 여수와 광양과의 갈등은 시작됐고, 결국 시의회와 시민 간 갈등과 반목을 불러왔다.

특히 순천과 광양, 여수와 순천의 갈등은 여수세계박람회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어 지역간 갈등이 성공개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따라서 통합을 두고 벌인 찬반 논란은 모두 지역발전이라는 명분 속에서 진행된 만큼 이젠 갈등과 반목을 버리고 지역의 공동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화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권일기자 cki@

찬성 기대 이상…통합작업 탄력

행정안전부가 10일 발표한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 상당수 지역에서 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작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애초 여론조사에서 중부권과 영남권, 호남권에서 1곳씩 3곳만 찬성률이 높게 나타나도 이번 자율통합 지원사업이 성공적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무려 6개 지역의 16개 시 · 군에서 찬성률이 우세했고 1곳도 찬반이 오차 범위 내여서 실제 자율통합이 성사되는 지역이 당초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는 게 행안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수도권 3곳 충청권 1곳 영남권 2곳 통합 찬성

연말까지 법안 마련…내년 7월 통합시 출범

◇자율통합 대상은 어디=자율통합 대상지역은 수도권 3곳, 충청권 1곳, 영남권 2곳이 최종 선정됐다. 수도권은 수원 · 화성 · 오산, 성남 · 하남 · 광주, 안양 · 군포 · 의왕 지역이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을 제외한 지역별 찬성률은 수원 62.3%, 화성 56.3%, 오산 63.4%로 나타났다. 또 성남은 54.0%, 하남은 69.9%, 광주는 82.4%였으며, 안양이 75.1%, 군포가 63.6%, 의왕이 55.8%로 조사됐다.

충청권은 청주 · 청원, 영남권은 창원 · 마산 · 진해, 진주 · 산청이 선정됐다. 청주는 무려 89.7%가 찬성했지만 청원은 50.2%로 비교적 낮았다.

마산의 경우 87.7%의 찬성률을 보인데 반해 진해(58.7%)와 창원(57.3%)은 50% 대에 그쳤다. 진주 · 산청은 진주가 66.2%, 산청이 83.1%로 나왔다. 창원 · 마산 · 진해의 경우 마산 · 함안, 창원 · 진해 통합안도 50%를 넘었지만, 상대적으로 3개 지역을 통합하는 안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아 이 안이 채택됐다.

또 구미 · 군위는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해당 지역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통합 지지의견을 제출하면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이 지역의 찬성률은 구미가 54.2%, 군위가 48.8%였다.

◇지방의회 의결 등 거쳐 통합 여부 확정=정부는 앞으로 통합대상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우선 이달 중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결정되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투표는 여론조사와 같이 유효투표 중에서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높으면 통합지역으로 최종 선정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통합자치단체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의견조사는 본격적 통합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통합의사를 사전에 확인한 것”이라며 “통합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으로 법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시 · 군 통합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통합시에는 행정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등 행정 · 재정적인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영산강 물막이 공사 시작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0일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학산교 인근에서 승촌보 건설을 위해 중장비들이 물막이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 독자적인 레이싱 시리즈 만들어야” F1 경주장 사후 활용 토론회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영암의 F1(포뮬러원) 경주장의 사후 활용을 위해서는 전남의 독자적인 레이싱(Raceing) 시리즈 창설과 국내·외 모터 스포츠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0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F1대회 과제와 미래비전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경기대학교 최용석 교수는 “F1대회는 매년 3일 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경기장 사후활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미국 최고 흥행 스포츠인 ‘NASCAR’(National Association of Stock Car Auto Racing)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전남의 독자적인 레이싱 시리즈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어 “법규 위반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의 도로에서 야간 비정규 레이스가 열리고 이러한 마니아 인구만 10만 명 정도 추산된다”면서 “이들을 양성화하고, 전문적인 경기 매니지먼트 등을 통한 ‘드래그(Drag) 레이스’ 창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레이스가 창설되면 경주장 가동률도 증가하고 경주장 주변에 튜닝단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면서 “드래그 레이스 저변 인구를 지역으로 유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